

울산 하천수 수질측정망 확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하천수 수계별 수질측정망 운영지점을 17개 지점에서 19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수질측정망 지점 타당성 조사 결과 태화강 상류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및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쌍수보)와 상북면 덕현리(청운교) 등 2개 지점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

재정부, 공해방지시설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19일 공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내 공해방지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회수·처리시설(VOC)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망관리(SCM) 고객관리(CRM) 설비 등 정보화설비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흥시, 공단 중·소형 소각로 폐쇄 유도

경기도 시흥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화공단 내 개별업체가 설치, 가동 중인 중·소형소각로의 폐쇄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1일 시(市)에 따르면 시화공단에 시간당 50kg 미만의 각종 폐기물을 소각하는 중·소형 소각로가 98개에 달하나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각로에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거나 적정 소각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다이옥신이나 아황산가스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민간환경감시단의 중·소형 소각로 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고 각 업체에 대해 소각로 운영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는 앞서 지난해 소각로 가동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21건을 적발, 이중 7개 업소를 고발하고 1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울산 중소도금업체들 '공동환경시설단지 구축'

울산의 중소 도금업체들이 공동환경 시설단지 구축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아전기(주)등 10여개 도금업체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비용과 막대한 환경시설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구 용연·용잠지구 국가공단 일대에 협동화 사업단지를 건립키로 했다.

이는 도금업이 울산에선 공해유발업종으로 분류돼 사실상 공장 신설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 도금업체들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첨단 협동화사업장으로 집단 이전한뒤 ▷ 공동기술 개발 ▷ 품질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 생산성 향상등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벤젠 노출기준 10배 강화

오는 7월부터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10배로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현재 10ppm인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미국과 같은 1ppm으로 강화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젠(1%이상 벤젠이 함유된 제제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7월부터 6개월에 한번 이상 실시되는 작업환경 측정에서 벤젠의 노출기준을 1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여천NCC 직원 조모(당시 50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비롯, 현재까지 10명이 직업병 환자로 판명되는 등 현 노출기준인 10ppm이하에서 일하는데도 벤젠

에 의한 직업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성고무나 의약품, 폭약, 방부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벤젠은 공기 중에서 증기 또는 가스상태로 흡입하거나 피부로 흡수될 경우 피로, 두통, 현기, 경련, 흥분, 의식상실 등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골수조직에 해를 가해 심할 경우 백혈병을 일으킨다.

발암물질 일중 VOCs 농도, 소각업체 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소각업체가 발암성물질의 일종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 북부지역 화학·섬유 등 6개업체 10개 배출구를 대상으로 VOCs 17개 검출성분의 배출 농도를 합산한 결과 소각업체가 141.512mg/m³로 가장 높고 목재가공업 130.235mg/m³,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화학 제품제조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각업체에서 VOCs의 배출 농도가 높은 것은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폐유 등을 동시에 소각하고 있으나 VOCs 제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VOCs 검출 성분별로는 광화학스모그를 유발시키는 톨루엔이 평균 20.229mg/m³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으며 다음은 스티렌, 자일렌, 염화비닐 순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비 다른 사업에 전용”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중인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일부는 투입조차 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 안영근(安泳根, 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수질관리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5년간 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모두 11조1천85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 가운데 25.8%인 2조8천882억원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4천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1천637억원은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지 않았으나 환경부에는 이 같은 지원금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 불용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업소 무더기 적발

환경부는 최근 두달동안 전국 2만2천496개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천45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삼화제관(주)과 호혜염색(주) 등 532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세아산업(주)과 한국라텍스공업(주), 한성모직 등 36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환경기사자격 미끼 사기사건 잇따라

최근 환경교육 전문기관을 사칭, 환경기사 자격증을 주겠다고 속여 교육비를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환경관리인연합회(회장 이상호)에 따르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2급 환경기사 자격증을 준다는 말에 속아 수십만원의 교육비를 사기당한 피해사례가 최근들어 경북 김천과 경남 통영, 인천 등 전국 10여곳에서 잇따라 발생, 환경관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법상 수질이나 대기오염 물질 등의 대규모 배출업체인 1-3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환경기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세차장이나 폐차장 등 규모가 비교적 작은 4-5종의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명하는 환경관리인만 있으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비 환경교육 기관은 세차장이나 폐차장에 예를 들어 “앞으로 4·5종 사업장도 환경기사 고용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문을 보내 무통장으로 교육비를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경북 김천에 있는 모 식품점(5종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정보씨는 최근 「환경관리자교육원」이 발송한 환경관리자 취득교육비 이란 공문을 받고 교육을 수료하면 환경기사 자격증을 준다는 말에 33만2천원을 보냈으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으며 환경관리인연합회에 신고했다.

환경관리인연합회는 정씨가 받은 공문의 주소지와 연락처, 기관의 이름 등이 모두 가짜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홈페이지(www.kemp.or.kr)에 유사 피해의 방지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띄웠다.

이상호 회장은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환경관련 자격시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 밖에 없는 만큼 연합회를 사칭한 어떠한 공문도 받는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제한 유예 수질계약제 첫 추진

상수원지역이라도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면 주민 재산권 제한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스스로가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질계약제’를 경남 김해지역에 도입하기로 하고 3월중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역인 경남 김해시 대포천은 부산과 울산지역 상수원으로, 자율적 협약이 아니면 낙동강법에 따라 김해시가 오는 7월부터 언제든지 임의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오는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면 낙동강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지역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오폐수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기초 환경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정부 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일조권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일조권도 환경피해로 인정돼 햇빛을 빼앗긴 시민들의 배상청구 사건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1월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올 하반기

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는 대기·수질 오염과 소음·진동, 해양·토양오염, 악취, 생태계 파괴 등에 국한되며, 지금까지 일조권 피해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나 변호사 비용, 피해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폭넓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 친환경적 소각로 설치 에너지 생산 예산절감 효과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해남에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해남군은 “해남읍 북평리 쓰레기 매립장에 노르웨이의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 25억원과 군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각로는 쓰레기를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폐열을 연료로 바꿔 냉·난방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분해 가스화방식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다.

1일 25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시간당 2Mwt의 에너지를 생산할 이 시스템이 완공되면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

의 냉·난방이 해결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던 기존의 처리방식과 달리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고효율의 열에너지를 활용토록 하는 이 시설은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보급중인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한강오염 단속기준 강화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팔당상수원 등 한강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들에 대한 수질기준을 최소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 가장자리 1km 이내에 위치한 수변구역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기존 20 또는 40~80ppm에서 10ppm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타지역에 대한 BOD, SS 단속기준도 각 40~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된다.

한편 한강환경감시대는 지난해 한강 환경오염사범 1천891건을 적발, 이중 610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단속활동도 해마다 늘려가고 있다.

폐수처리장신기술도입, 수질개선

경기도는 올해부터 하수·분뇨·축산폐수 처리장을 신설 및 확장할 때 신기술인 '생물학적 초강력 막분리 시스템(BIOSUF)'을 도입, 수질을 획기적

으로 개선키로 했다.

도(道)는 16억6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양평군 분뇨처리시설(하루 90t처리)에 BIOSUF 공법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실제 방류수가 법적 방류수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방류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BIOSUF 공법을 이용했을 경우 BOD의 경우 1.7ppm(법적기준치 30ppm), COD 9.5ppm(50ppm), SS(부유물질) 3ppm(30ppm), T-N(총질소) 8.7ppm(60ppm), T-P(총인) 1.9ppm(8ppm)으로 나타났다.

이 공법은 폭기조에서 미생물농도를 고농도로 유지해 유기물을 분해한 후 침전조 대신 여과막을 이용해 분리시켜 정화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할 때 이 공법을 사용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다중시설 공기오염관리 확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버스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청사, 도서관, 종합병원, 실내주차장, 신축아파트 등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올해 안에 전면 개정,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지하역사와 지하도 및 지하상가(2천㎡이상)에만 적용돼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버스 터미널 대합실, 공항여객청사, 항만종합여객청사,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종합병원,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규 공동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 공기는 일산화탄소(CO)의 경우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1천ppm이하,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 150 μ g/m³이하, 포름알데히드 24시간 평균치 0.1ppm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 만~1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실내 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이를 고지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노동부 석면 노출기준 강화
청석·갈석·백석면 등 0.1개/cm³ 적용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는 석면의 노출기준이 지난 86년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개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석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 기타석면의 노출기준이 각기 달랐으나, 개정안에서는 0.1개/cm로 통일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토록 했다.

그동안 청석면은 cm³당 0.2개, 갈석면 0.5개, 백석면 등 기타석면 2개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노동부는 또 발암성 물질로 확인된 물질(A1)에서도 모든 형태의 석면에 대한 규정을 cm³당 0.1개로 규정했다.

이밖에 총분진의 노출기준에서도 길이 5um 이상의 석면은 모든 형태에서 0.1개/cm³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미국은 모든 석면에 0.1개/cm³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석면의 노출기준을 현행 2개/cm³에서 0.1개/cm³ 수준으로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은 청석면 0.025개/cm³, 백석면 및 기타 0.05개/cm³의 기준을, 영국은

청석면 0.2개/cm³, 백석면 및 기타 0.3개/cm³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내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석면규제 강화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진동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소음·진동 규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 환경관련 민원 7,780건중 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6,606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최근 들어 소음·진동관련 민원과 국민의 피해호소가 급증함에도 우리나라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5dB이 완화된 수준으로 소음은 55~75dB(A), 진동은 60~70dB(V)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 정도 강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대상 사업장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 상반기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후, 5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0억원 용자

경기도 안산시시는 최근 관내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0억원을 용자 지원한다.

이 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연리 3%,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市)는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이나 공동방지시설, 개별 측정기기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자금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용자 희망업체는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시 환경보호과에 제출해야 하고 용자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문의: ☎(031)481-2885)

